

김관영 도지사, 국회의장에 현안 건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는 사필귀정”

새만금 내부개발 등 지원 요청... 우원식 의장 “자치도 추진 사업 필요성·중요성에 공감... 국회 차원에서 지원 검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2025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내부개발,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설립 등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을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융자 조성에 2025년도 예산 1,370억원 반영을 건의하며, 환경생태융자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실버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및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설립과 관련해 창업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하겠다고, 2025년도 예산으로 5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6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집중적인 건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가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임을 언급하며 “국가경제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

되어 지역소멸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김관영 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상속공제” 등 지역 이전기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국회 심사 기간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정적 죽이기 중단, 살리는 정치 복원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무죄선고 판결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평을 내고 “정적 죽이기 기를 중단하고 민생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수석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하며, “어제(2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고 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단지 진실을 요구했을 뿐인 발언을 위증교사로 왜곡하여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는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섯 번이나 기소했으며, 심지어 증거 없이 기소 폭탄을 날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권을 악용한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하며, “그러나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 있는바,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이재라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어제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불기속 기소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만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난번 대선자금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재판 결과가 전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앞으로도 여러 건이 기소된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도내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 하지 말라”

전북에서 시민단체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전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열렸으며,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진보당, 순창),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김근수·김형선·김운수·방응승·차상철·임병오(순위 무순)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병길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산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중에 무기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펠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와 천군, 미사일 탑재 레이다, 포탄 등 무기 지원 문제, 참관단 파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 무기 지원을 요구해 온 바 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



도내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힘 쓰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수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 감사 도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휴대폰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북 군사행동과 심리전 활용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한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주 신원식 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과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미국이나 나토 등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미국이 자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데 이어 한반도 외에 사용하지 않겠

다고 선언한 대인지뢰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고, 영국 등에서 미사일 등 추가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 나토와 조율하겠다는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무기 지원 추진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폴란드와 미국에 판매, 대여하는 방식으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무효 지원한 사실이 미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하며, “이제 포탄 등의 공격 무기 직접 지원, 파병 등 군인 파견으로 나아가면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말하며, “핵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지원과 군사개입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하며, 국회 등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 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는 전북계례하나(이사장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박영숙), 사단법인 한몸평화(이사장 김운수),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 전북 여성노동자회(대표 김익자) 등 전북에 소재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기여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곧 준비위원회 과정을 거쳐 본 조직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창업 허브로 ‘주목’

제2회 스타트업 경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SWITCH(신규 트랙)가 26일 서울 라이즈모드그래프컬렉션(홍대 인근)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기후테크 특화지역으로서 전북을 홍보하고, 도내의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테크 투자사,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가치 100억 미만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으로 모집한 결과 전국 50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선발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도의 6, 도내 5)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9월 23일 군산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경진대회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의 제품 판매를 앞둔 창업기업이 지원했던 반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이차전지와 더불어 AI농업, 에너지, 탄소포집(CCUS) 등 연구개발



단계의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본선에 오른 유망 기후테크 기업들의 기후테크 기술과 사업전략 등 열띤 경쟁 발표가 있던 뒤 전북자치도의 기후테크 창업환경과 성장 기회,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기후테크 산업 동향과 기회 등 전문가 발표 및 토크이 이뤄졌다.

입상한 3개 기업에는 총 1,8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투자사로부터의 투자, IR 코칭, TIPS프로그램 추천, 기업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기후테크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며, “경진대회에 참여한 우수한 팀들이 전북자치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문안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방문 콘진원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중인 정보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위탁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센터 시설을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정보기술 교육 지원과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기술 개발 및 정보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 등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교육과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기술 개발 벤처창업 지원 및 관련 단체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도



모하고 있다. 박정규 위원장은 “도내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무실 임대 아닌 기술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ICT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업기술원 신규 연구사업 시설비, 주먹구구식 편성”

이정린 도의원 “중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없이 기후대비 작물 육성사업 추진”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26일 농업기술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 신규 연구사업 시설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중장기적 기후 위기 대응 전략도 없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기술원 신규 연구사업 중 1억 이상 시설비 지원 사업에 7건에 해당되며, 각 사업별로 시설비 산출내역도 없이

특히,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 사업’은 연구과제 중 사업비 규모(9억 3천만 원)가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에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시설비 7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도 표기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2023년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실행방안 등을 통해 전

북자치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전략작물, 품종전환 품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시범 연구 사업’은 벼, 상추, 사과, 파프리카, 인삼 등 품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작물육성 품목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각 권역별 기후변화 대응 실행방안처럼 전북도 전체 각 권역별로 전략작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